

# 신자유주의 유산, 어려운 청산: 포스트-태환법 시기, 아르헨티나 제조업의 회복\*

다니엘 아스빠아수, 마르틴 스초르\*\*

포스트신자유주의 시대에 라틴아메리카 발전 전략을 채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이 글은 먼저 발전과 경제성장에 대해 간략히 논한 뒤에 지속가능한 국가프로젝트 창출 능력을 위한 정치 제도와 정치 엘리트의 역할을 검토하고, 기업 행위자와 사회적 행위자의 역할도 분석한다.

신처럼 편재(遍在)하던 국가가 귀환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고 90년대처럼 공공부문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즉, 국가발전계획은 중남미의 불평등과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의 협력을 요구한다.

핵심어: economía/ neoliberalismo/ industria/ posconvertibilidad/ Argentina; 경제/ 신자유주의/ 산업/ 포스트-태환법/ 아르헨티나

## I. 태환법 체제의 위기, ‘평가절하 대책’이 산업에 미친 효과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과 존 이트웰(John Eatwell)은 30년도 더 전에 이렇게 지적했다. “결국 회피할 수 없다고 판명될 평가절하를 뒤로 연기하는 것,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야기하며 평가절하 대책을 회피하는 것은 사후에는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었음이 드러난다. 하지만 사전에 그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sup>1)</sup>

이것은 아르헨티나에서 1991년 초 달러화와 1:1로 교환하는 고정환율제도(‘태환법’-역주)가 수립된 이후 1995~2001년 시기에 발생한 일에 대한 적절한 예언이다. 이 시기의 막바지에 소비자물가지수가 2.6% 하락했고, 공개 실업률의

\* 이 글은 국립과학기술연구소(Conicet) 지원을 받은 PIP 03153 프로젝트에 따라 집필되었다. 이 연구 계획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 “Desempeño y transformaciones de la cúpula empresarial argentina y la cúpula industrial entre 1991 y 2008. Rupturas y continuidades entre la convertibilidad y la posconvertibilidad.”

\*\* 다니엘 아스빠아수와 마르틴 스초르는 라틴아메리카사회과학연구소(Flacso)와 국립과학·기술연구소(Conicet)의 경제·기술 연구원이다.

1) Joan Robinson and John Eatwell: *Introducción a la economía moderna*, Fondo de Cultura Económica, Madrid, 1976.

경우 이미 충분히 높던 16.6%에서 18.3%로 더욱 증가했다. 공업 부문도 심각한 긴 마찬가지였다. 1995~2001년 사이에 도매물가지수가 0.75% 하락했고, 고용 규모가 2.2% 감소되었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공식부문 노동자(trabajadores registrados)가 11% 이상 감소했고, 비공식부문 노동자 수는 근 10%나 증가했다.<sup>2)</sup> 이 밖에도 비관적인 통계는 아주 많다.

여러 국가에서 워싱턴 컨센서스가 제시한 가설들을 ‘복음’으로 여겨 실천하였다. 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민영화, 탈규제, 경제개방, 구조조정, 가치증식 과정에 대한 금융 부문의 해계모니, 무엇보다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맹신, 구체적으로는 경제주체들이 시장에 압력을 행사하는 메커니즘이 완벽히 작동하리라는 믿음 등이었다. 이 정책은 많은 나라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는데, 아르헨티나의 위기는 최악의 것 중 하나였다.

태환법이 시행된 시기에(1991~2001), 전체 GDP는 29% 이상(불변가격기준) 증가한 반면, 공업 부문 GDP는 단지 10%만 증가했다. 이는 마지막 군사독재시기(1976~1983)부터 시작된 탈공업화, 공업 부문의 퇴행적 재구조화 과정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2001년에는 GDP에서 공업 부문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90년대 초반과 비교해 다시 축소되는 일이 발생했고(거의 3%포인트에 가깝게 하락해서 1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다), 1인당 제조업 부문 GDP도 10% 이상 하락했다(이 기록들은 모두 수입대체산업화가 주도적인 시기였던 30여 년 전보다도 하락한 것이었다). 또한, 비교우위이론에 완전히 사로잡혀 제조업 구조가 천연자원 개발·이용과 관련된 부문으로 퇴행했다. 자본재, 금속기계, 전자산업 등 전략 부문에서 생산망의 통합을 위한 잠재력이 명백히 감소한 것이다.

바로 그 2001년 말에 대규모 민중시위가 발생하였고, 태환법 시대가 저물었음을 보여주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했을 정도로 억압이 심했지만, 당시 시위대는 정부제도의 성격, 국가정책의 전략적 방향, 태환법 체제 등 기존 제도와 정책에 대한 급진적 변화를 요구했다. 기성 제도와 정책은 1990년대에 신자유주의 비호 아래 수립되고 공고해진 것으로 당시만 해도 마지막 군사독재시기(1976~1983)가 남긴 대부분의 ‘숙제’를 해결한 것으로

2)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 글에서 이용하고 있는 통계정보는 모두 국립통계·센서스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의 공식 홈페이지 [www.indec.gov.ar](http://www.indec.gov.ar)에서 볼 수 있다.

간주되었다.

그때 아르헨티나는 역사상 가장 심각하면서도 긴 위기 중 하나를 겪었다. 예상대로 고정환율제의 내파(內破)가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로 인해 4년 연속 경제활동이 하락하고, 제조업이 현저하게 위축되었다. 자본집중 심화, 빈곤·극빈층의 드라마틱한 증가, 실업률·저고용의 급증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 감당기 힘든 재정적자, 점증하는 대외부문 불균형(자본유출의 가파른 증가로 악화 일로에 있었다), 빈번한 외채 재협상 등도 문제였다.<sup>3)</sup> 결국, 2002년 1월 초 경제 비상사태와 환율제도 개혁에 관한 법률(Ley de Emergencia Pública y Reforma del Régimen Cambiario)이 제정되어 미뤄왔던 환율제도 개혁이 공식적으로 이뤄졌다.

여기서 태환법 시기의 막바지 국면과 관련해 두 가지 핵심 주제를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이 두 주제에는 모두 ‘90년대 모델’의 최종적 위기가 반영되어 있다. 첫째, 경제 활동 사정을 살펴보고, 둘째,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제안들을 검토해보자.

위기는 1998년 중반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90년대 모델을 지탱해온 정책과 전략의 틀 내에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악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97~2001년 사이 GDP는 4.8%, 제조업 부문 GDP는 16.5%가 하락했다(여기에 가장 심각한 해인 2002년을 포함시키면, 통계 지표는 더욱 극단적으로 바뀌어 GDP는 15.2%, 공업 부문 GDP는 25.6%의 하락을 보여준다) 이것이 극단적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면서 국제금융기구 및 관련 지역기구들의 ‘권고’를 잘 따르던 모범생 아르헨티나가 보여준 성적이었다. 사실, 이와 같은 대책들이 도입되고 적용되었을 때 이미 예상되었던 결과이기도 했다.

심각한 경제 통계를 바탕으로 두 번째 주제인 ‘해결책’을 검토해보자. 태환법 체제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놓고 지배층 내부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은 1998년부터 더욱 격렬해졌는데, 그때는 여러 아시아 신흥국, 브라질 등에서 평가절하 조치가 채택되고, 중기적 경기 침체가 시작될 참이었다.

(경제의 달러화를 포함한) 고정환율제를 계속 고수하던 이들은 기본적으로

3) 2001년 10월 빈곤층(pobreza)과 극빈층(indigencia)은 각각 28%, 9.4%에 이르렀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의 18.3%, 저고용률은 16.3%를 차지했다(2002년 5월 빈곤율 41.4%, 극빈율 18%, 실업률 21.5%, 저고용률 18.6%). 2001년 재정 불균형은 GDP의 약 4% 수준, 경상수지 적자는 38억불에 달하고, 자본수지 적자도 83억불에 달했다.

공공서비스·금융서비스 제공과 관계가 있는 외국 기업들의 입장을 추종했다. 이 주장을 구체화해 보면, 태환법 시기(1991~2001)에 이 기업들이 그랬듯이, 자신의 자산과 소득, 미래 이익을 ‘경화’ 형태로 바꾸어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 평가절하로 위기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하던 자본가들은 환율상승 및 환율자유화를 추진했다. 이들은 자산이 외국에 있거나 세계시장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때문에 이 입장을 지지했다. 특히,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구조적 비교우위, 평가절하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노동비용의 감축 등으로 재화 수출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몇몇 국내외 대규모 경제그룹이 급격한 수익 증가를 기대하며 이 견해를 지지했고, 농·축산물, 탄화수소, 광업 생산자들도 동참했다. 그러나 임금과 같은 현지 생산비는 평가절하 추세와 동조되기 매우 어려웠다.<sup>4)</sup>

여러 사회계층이 이 주장에 지지를 보냈다(여러 소자산가 계층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정계, 학계, 노동계, 재계 등 여러 계층이 참여하는 이질적인 주체들 간의 동맹이 형성되었다. 이 동맹은 아르헨티나 민중운동의 전통과 관계 깊은 개념인 ‘산업’, ‘생산과 노동’, ‘자국 부르주아지’, ‘민족’ 등을 옹호하는 이념·담론에 입각했다.

사실, 이는 경제 권력을 보유한 두 분파 사이의 치열한 경쟁이었다. 이들 모두 90년대에 추진된 금융·무역 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국가 축소, 탈산업화, 생산·제조 설비의 1차산업화 등으로 이익을 얻은 집단이었다.

이 두 분파는 기존 환율제도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위기 비용 전체를 민중 부문에 전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 분파가 위기 비용의 나머지를 떠맡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즉, 이는 어떤 분파가 헤게모니를 행사할 것인지, 어떤 분파가 지배블록 내에서 상대적인 종속의 위치로 강등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물론 두 분파 모두 노동자계층, 나아가서는 민중 부문 전체의 소득 감축에는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초기 국제통화기금은 평가절하 조치에 대해 소극적 지지를 보냈지만, 나중엔

4) 2002년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은 249.1%나 상승했다(그 해 중반에는 265% 급증해 정점을 찍었다). 소매 물가(los precios minoristas)는 40.9% 상승, 도매 물가(los precios mayoristas)는 118.0% 상승을 기록했다. 반면, 공업 부문 평균임금은 13.3%만 하락했다.

환율자유화를 위해 강력한 로비를 펼쳤다. 평가절하 조치는 자주 채택되는 정책은 아니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이 조치가 취해지자 기존 고정환율제(달러공용화 경제) 만큼이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고 퇴행적인 결과를 낳았다. 평가절하 정책이 불러온 핵심적 효과는 상대가격 구조의 급변, 특히 환율과 임노동자 실질소득의 급격한 변동이었고,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쳤다. 이는 경제활동의 전반에 걸쳐 강압적인 조정으로 이어졌고, 심각한 경제위기(GDP의 10% 이상 하락, 현격한 실질임금 감축(30% 상회)을 낳았다. 가장 심각한 해는 2002년으로, 그 해에 금융을 통한 가치증식,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헤게모니가 파산했고, 낯설고 불확실한 축적체제로 이행이 이루어졌다. 이 축적체제는 소위 ‘가치가 높은 달러 혹은 경쟁력 있는 달러(dólar alto o competitivo)’를 중심축으로 형성되었다(많은 이들은 이 중심축을 재공업화, 신자유주의 15년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의 핵심 ‘정책’이 평가절하된 통화를 유지하는 것, 요컨대 환율정책을 뛰어넘는 생산발전전략(즉, 공업발전전략)이 따로 없었다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평가절하가 수반된 상대가격 구조의 근본적 조정은 2002년도에 정점에 달했고, 그 이후 다소 진정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안정화되지는 못했다. 비교역제에 대비한 교역재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국산 공산품 도매물가지수도 고정환율제 폐지 이후에 급격히 상승했다(2001~2008년 사이 213.9%). 하지만 이 상승폭은 농·축산물(246.8%), 비금속광물(246.1%), 원유와 천연가스(396%)의 상승폭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이는 일반적인 도매물가 수준에 비해 공산품 도매물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포스트태환법 시기 아르헨티나 지배 블록 내에 ‘승자와 패자’의 균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sup>5)</sup>

특히, 제조업 내에서도 분야별로 상대가격의 차이가 현격하다는 것을 강조할

5) 2001~2008년 사이에 아르헨티나 경제와 공업은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각각 45.5%, 52.8%의 성장 폭을 기록했다(이 시기 공업화 계수도 15.4%에서 16.2%로 상승했다). 하지만 2005년(이 해에 GDP와 제조업 GDP가 1998년의 통계를 각각 상회했다)부터 제조업 성장 폭이 1998년을 밑돌았다(이것은 제조업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재화 생산부문에서는 건설, 교통, 텔레커뮤니케이션, 상업이 활성화되었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 증가가 활성화되었다.

한편, 포스트 태환법 시기에도 1990년대(이는 1976년부터 기원한다)동안 공고해진 제조업의 특성이 지속되었다. 세계 수준에서 보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분업구조, 농공업(agroindustria) 및 원자재(commodities) 부문에 대한 편중, 국내 고용에 미치는 제한적 효과, 생산성 및 기술발달흡수 측면에서 높은 단계로 진입하는 데 집착하는 것 등이 주요 특징이었다.

필요가 있다. 가격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분야에 따라 극단적인 반대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가령, 전자산업의 경우엔 2001~2008년 사이에 가격이 무려 770.7%나 상승했지만, 제화(製靴) 산업의 경우 71.75%만 상승했다. 이 극단적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된 것이다. 실질 환율의 급증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그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수입중간재 부족 현상(초단기에는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 일), 생산의 여러 기능의 변경, 국제가격의 국내가격으로의 전환 등이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과 강도로 영향을 끼쳤다.

이 요인 이외에도 여러 제조업 분야 도매물가의 상대적 추이와 각 분야 시장 구조 사이에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국내 공급원이 과도하게 세분화된 분야에서는 애초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데다가 달러 가치마저 상승하는 바람에 보호의 격차가 발생했다. 그 결과, 2001~2008년 사이 이 분야 공산품의 가격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제화(71.7%), 공작기계(66.5%), 섬유(129.8%), 제분(130.3%) 등이 그런 사례들로서 이 산업들은 거의 전적으로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국제 시장에 접근할 가능성도 아주 낮다.

반면, 다른 분야는 집중도가 아주 높은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환율 급상승이 긍정적 영향을 주어 상대가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창출된 수익은 타 분야보다 현격하게 높았다. 이를테면 맥주 양조(263.0%), 농기계(297.9%), 시멘트·석회(270.6%), 철강업(440.6%), 알루미늄 원석(266.3%), 타이어(318.0%), 식물성 유지(419.4%)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위에 나열한 사례 중 마지막 네 분야에는 국내 시장에서 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하고도 비중 있는 과점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네 분야의 제도적 환경도 과점 세력에게 유리해서 이른바 ‘경쟁 보장’ 메커니즘이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국제적인 가격 상승 및 수요 증가 추세로 수출계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것이 최근의 세계경제위기가 강타하기 전까지 계속되던 상황이었다.

## II. 산업의 집중화와 탈국적화

과점적 시장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현실은 중요성이 적지 않은 문제를

검토하도록 이끈다. 그것은 아르헨티나 산업에서 발생해온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90년대 후반기와 포스트-태환법 시기 경제력 집중의 역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재계 상층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 유형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우선, 산업 상층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의 매출액과 총생산가치의 관계를 검토해볼 수 있다(두 통계 모두 경상가격 기준이다). <표 1>이 보여주듯이, 1995~2008년 사이의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13.2% 성장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환법 시대의 후반기(1995~2001)에는 연평균 -1.1%, 포스트태환법 시기에는 연평균 27.2% 성장하여 명백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100대 기업의 매출액을 보면, 아주 높은 성장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기간 전체 동안 연평균 15.1%, 1995~2001년 시기 연평균 2.4%, 2001~2008년 시기에는 연평균 27.2%를 기록했다.

<표 1> 아르헨티나 공업 총생산가치(VBP)와 상위 기업 매출액\* 1995-2008 (백만 페소, %)

연 도	공업 총생산가치(1)	매출액(2)	(2)/(1) 상관성
1995	119,152	42,717	35.9
1996	126,301	45,888	36.3
1997	137,834	50,975	37.0
1998	137,675	54,259	39.4
1999	123,551	51,459	41.7
2000	120,677	52,100	43.2
2001	111,520	49,310	44.2
2002	187,349	108,759	58.1
2003	239,359	113,864	47.6
2004	283,931	135,880	47.9
2005	330,225	156,536	47.4
2006	391,275	170,828	43.7
2007	479,143	209,223	43.7
2008	600,568	265,984	44.3
95-01 연평균	-1.1%	2.4%	
95-08 연평균	13.2%	15.1%	
01-08 연평균	27.2%	27.2%	

\* 여기서 상위 기업이란 매출액기준 제조업 부문 100대 기업을 가리킨다.  
출처: 각 기업 대차대조표, Indec과 *Prensa Económica y Mercado* 통계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제조업 생산 전체에서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태환법 시대의 후반기(1995~2001)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기록했다(35.9%→44.2%). 포스트태환법 시기(2002~2008)에도 약 44%~48% 사이를 기록했다(2002년에는 56.1%로, 최고 비중을 보여주었다). 즉, 산업 집중 현상은 태환법 시기의 최종 위기가 시작된 1998년 이후부터 심화되더니 2002년에는 급격히 심화되었다가 그 뒤에 다소 진정되어 하향 안정화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의 지배적 추세보다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sup>6)</sup>

과도한 경제 집중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 중에서 제조업 부문을 대표하는 과점 세력 다수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현상은 특히 포스트 태환법 시기에 더욱 뚜렷해졌는데, 이는 달러 가치 상승과 임금비용 감축에서 힘입은 것이다(특히, 식료품, 석유, 기초 금속, 화학 분야 등에서 생산된 1차산품, 자동차 조립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90년대 개방과 ‘탈규제’ 정책이 산업별로 불균등하게 적용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가령, 자동차 산업을 위한 특별제도, 농공업 분야의 각 시장에 대한 실질적 규제력을 과점적 구매자(oligopsonio)에게 이전한 조치, 원료 시장에 대한 특수한 ‘탈규제’ 조치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sup>7)</sup>

게다가, 대표적인 과점 기업들이 지주회사 형태의 복합경제집단(unidad económica compleja)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복합경제 집단은 생산, 기술, 통상, 금융 분야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한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 거대 기업 집단은 국민경제 작동에 매우 중요한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 시장 권력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갖고 있다(특히, 수요가 많은 중간재 생산과 관련된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 집중 현상은 인수 합병은 물론 대기업 활동(가령, 가격 결정과 관련된 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공식적인 제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사정과도 관계가 깊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PYMES) 관계를 통제하는 법·제도도 대기업에게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한 실정이다.

거시경제지표에서 제조업 부문 기업 엘리트(상위 100대 기업) 비중이 높아지

6) 마지막 군사독재시기(1976~1983년)부터 아르헨티나 경제 전반에 일반화된 현상을 간략히 요약하면, 몇몇 경제그룹이 제조업 부문의 주요 기업 다수를 통제하는 것이다(제조업 전반의 실질적 집중도를 차지하고서라도 말이다).

7) 이 정책들은 포스트 태환법 시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수입에 미치는 ‘환율’ 변동의 효과를 제외하고 말이다.



〈표 2〉 아르헨티나 상위 기업의 유형별 기업 수 및 매출점유율\*  
1995, 2001, 2004, 2008 (절대치, %)

유형별 기업 수				
	1995년	2001년	2004년	2008년
국내기업	49	32	31	25
초국적기업	36	56	60	72
합작기업	15	12	9	3
총	100	100	100	100
매출점유율				
	1995년	2001년	2004년	2008년
국내기업	32.4	20.8	26.9	27.8
초국적기업	38.9	70.9	66.9	70.4
합작기업	28.7	8.3	6.2	1.8
총	100.0	100.0	100.0	100.0

\* 여기서 상위 기업이란 매출액기준 제조업 부문 100대 기업을 가리킨다.  
출처: Flacso의 경제·기술 분야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고 있는 현상 이면에는 또 다른 현상이 숨어 있다. 그것은 기업 엘리트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 유형이 큰 변화를 겪어왔다는 점이다. 즉, 제조업 상위 100대 기업 구성에서 강도 높은 탈국적화 현상이 발생했다. 이 현상은 90년대 중반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하여 최근에도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다.

<표 2>가 잘 보여주듯이, 1995~2001년 사이 초국적기업 수는 36개에서 56개로 증가했고, 초국적 기업의 매출액 점유율도 38.9%에서 70.9%로 급증했다. 이 시기에 거대 산업 자본의 소유권 변천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소유권 이전도 중요하고, 매출액 점유율의 변화도 중요하다). 특히, 소유권이 이전된 기업들은 제조업 부문의 여러 시장을 대표하던 기업들이었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들이었다. 그 결과, 제조업 엘리트 구성에서 합작기업(asociaciones de capital)과 국내기업의 상대적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었다.

태환법 시기(1995~2001)에 합작기업의 매출 점유율이 무려 20.4% 포인트가 축소된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1999년 스페인 기업 렘솔(Repsol)이 아르헨티나 국영석유회사(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YPF)를 인수했다. 둘째, 자동차 산업 분야의 세 합작기업인 아우또라피나(Autolatina), 시아테아(Ciadea), 세벨(Sevel) 등이 모두 해산되었다. 그 결과,

이 합작 기업의 매출은 푸조-시트로엥, 폭스바겐, 피아트, 포드, 르노 등 초국적기업들이 흡수했다.

또한, 국내기업 수가 체계적으로 축소되고, 제조업 상위 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1995~2001년 17개 기업 감소, 11.8% 포인트 축소)은 주로 몇몇 국내 경제그룹이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에 속해 있던 기업들의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 기업의 소유권은 외국 자본 수중으로 넘어갔다(아스트라[Astra], 배글리[Bagley], 까날[Canale], 인두빠[Indupa] 등이 그 사례들이다).

1995~2001년 시기에 발생한 생산의 점증하는 집중은 제조업 대자본의 특이한 집중화와 탈국적화 현상과 관계가 있다. 이 현상은 초국적 자본의 현지화를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제공한 여러 가지 특혜 조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이런 특혜는 대체로 포스트태환법 시기에도 유지되고 있다). 특히, 포스트태환법 시기에도 과거 정책과의 연계성은 아주 두드러진다. 무역·금융 자유화, 시장 전반의 탈규제 조치, 외국투자자에게 다양한 보장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의 극단적 자유화, 아르헨티나에 불리한 양국 투자 협정 체결 등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에 대한 공식적 지지를 통해 '내수'를 국내에서 역내로 확장하고, 남미공동시장 회원국(특히, 브라질)에 위치한 계열사들과 공동으로 생산 보완 전략을 수립하는 기회도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자동차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제도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도 여전히 존속시키고 있다.

포스트태환법 시기에도 상위 100대 기업에서 국내기업들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지속되었다(2001~2008년 사이 7개 기업 감소). 하지만 국내기업 축소 현상이 매출액 점유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같은 기간에 국내기업의 매출액 점유율은 7% 포인트가 증가했다). 그것은 이 시기에 몇몇 거대 국내 경제 그룹이 수출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했기 때문이었다(대표적 사례는 아르코르(Arcor), 레데스마(Ledesma), 페레스 콤파넬(Pérez Companç), 테친트(Techint) 등이다).

어찌되었든 2008년에 상위 100대 기업의 70% 이상,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은 외국자본의 수중에 놓였다.

이 주목할 만한 탈국적화 현상은 공업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과도 관계가 있다. 각각의 요인이 미친 효과는 저마다 다르지만, 여러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외국 기업은 자기가 통제하던 기업을 합병(fusión)하여 매출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아르헨티나의 거대 과점기업의 주식 지분을 구매하기도 했다(이 과정은 브라질 거대자본이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했다). 대표 사례들로 냉동·냉장기업 스위프트(Swift), 피넥스코르(Finexcor), 퀵푸드(Quickfood) 등, 시멘트 기업 로마 네그라(Loma Negra), 맥주양조기업 킬메스(Quilmes), 아르헨티나 2대 철강기업 중에 하나인 아신다르(Acindar), 섬유기업 알파르가파스(Alpargatas) 등이 있다.

포스트 태환법 시기에도 공업 부문의 탈국적화 과정은 역전되기는커녕 완화되지도 않았다(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부추기기까지 하는 법적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다). 2003년 9월말 네스포르 키르츠네르 당시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자국 부르주아 계급을 다시 강화하자”고 호소하고, “국가의 이익에 진정으로 기여할 자국 부르주아 계급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국가적 차원의 발전 프로젝트는 불가능하다”고 천명했다.<sup>8)</sup> 하지만 아르헨티나가 초국적 자본을 위해 추진하는 전략은 국내 자본을 위한 전략 및 국내 자본에 요구하는 ‘기업가 소망’과도 현격하게 대조를 이룬다.

초국적 자본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는 것(여기서 아르헨티나 기업 다수가 스페터적인 정신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은 새로운 거시·미시경제적 환경에서 핵심적인 자본 분파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대외 시장 참가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발견했기 때문이다.

제조업 부문의 탈국적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아르헨티나 경제·사회 변화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국민적 결정권’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 이는 민족자본에 의한 ‘국가 프로젝트’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프로젝트를 통해 재산업화를 이룩하여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과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갖추는 일이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8) 이는 2003년 9월 29일에 개최된 단기 신용지원 프로그램 발표회장에서 네스포르 키르츠네르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이다. [www.casarsosada.gov.ar/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4062&Itemid=120](http://www.casarsosada.gov.ar/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4062&Itemid=120).

### III. 분배 역학, 과점 기업의 과도한 이익, 사회 갈등

중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포스트테환법 시기는 고용 창출, 분배 패턴, 제조업의 수익률 등의 측면에서 90년대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면서 고정환율제를 폐지한 것은 생산 집중 과정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일자리 격감 현상, 대규모 자원이 노동에서 자본으로 이전되는 현상, 제조업 부문에서 장기간 높은 이익률이 발생하는 현상 등도 야기했다(이는 90년대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일들이었다). 특히, 2008년 중반부터 제조업 자본 가운데 가장 집중도가 높은 분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률이 15%~19%(2004~2007)에 이르던 시기로 돌아가기 위해 강력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아르헨티나 통화를 다시 평가절하하고, 임금비용을 다시 감축하고 싶은 것이다.

이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 제조업 부문의 실적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을 분석해서 얻은 몇 가지 추론을 검토해보자.

〈표 3〉 아르헨티나 제조업: 생산, 고용, 생산성, 임금비용, 생산성/임금비용  
2001-2008 (2001=100)

연 도	생산	고용	생산성	임금비용*	생산성/ 임금비용
1995	104.8	130.4	80.4	106.6	75.4
1996	111.4	125.8	88.6	105.5	84.0
1997	121.8	127.0	96.0	98.9	97.1
1998	124.3	124.6	99.8	100.3	99.4
1999	114.0	115.0	99.2	102.7	96.6
2000	112.6	107.0	105.3	101.9	103.4
2001	100.0	100.0	100.0	100.0	100.0
2002	90.3	90.8	99.5	64.1	155.3
2003	106.1	95.6	110.9	63.8	173.8
2004	121.0	104.9	115.3	75.6	152.6
2005	132.0	111.9	117.9	84.3	139.9
2006	144.9	117.9	122.9	97.3	126.3
2007	157.9	123.9	127.3	107.2	118.7
2008	167.2	127.4	131.3	108.6	120.9

\* 임금비용은 공산품도매물가지수(IPIM)를 통해 명목임금을 실질임금으로 전환하여 (deflactor) 계산하였다.

출처: Indec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a) 1998~2002년 시기 제조업 생산은 뚜렷하게 위축되었고, 그로 인해 자본스톡의 저활용(subutilización)이 두드러졌다. 이 시기 이후에 생산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다. 2002~2008년 시기 생산은 85.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2001년 대비 67.2% 증가율).

(b) 생산 증가 추세는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2008년 제조업 부문의 고용은 2002년 대비 40.3%나 증가했다. 2008년의 노동자 수는 1995년 기록에 비해서는 적지만, 장기간에 걸쳐(1976~2001) 노동력이 쫓겨나던 현상이 역전되는 조짐으로 볼 수 있다.

(c) 포스트 태환법 시기에 노동력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이는 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된 것이다). 2002~2008년 시기 노동생산성이 32.0% 증가했다(2001년 대비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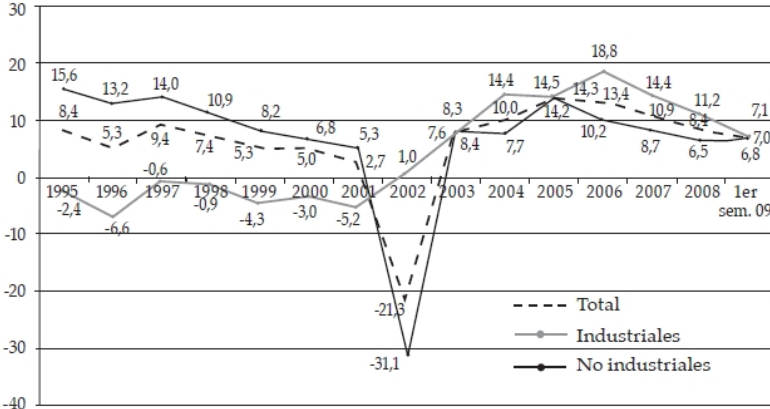
(d) 노동력의 임금비용은 2002~2003년의 2년간 1/3 이상 감축되었다. 이는 고정환율제 폐지에 따른 상대가격 재조정, 그로 인한 임금 수준의 하향 조정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임금비용은 꾸준히 상승해 2008년에는 2001년 대비 8.65% 증가를 기록했다.

(e) 노동 생산성(지속적인 증가)과 임금비용(2002~2003년의 급감, 그 뒤 회복)의 추이를 보면, 대규모 자원이 노동에서 자본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2002~2003년 사이에 가장 많은 자원이 이전되었다. 생산성/임금비용을 노동착취 지표로 간주하여 검토해보면, 2002~2003년의 2년간 통계는 1995년과 비교해 2배를 상회한다. 그 뒤,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현재 2001년(이때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대비 약 2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요컨대, 포스트 태환법 시기 제조업 자본가들은 산업 부문 창출 이익을 과도하게 점유하였다. 위의 (e)의 내용과 관련해서 제조업 부문에 속하는 기업들의 이익률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제조업 자본 중에 가장 집중도가 높은 분과는 잉여(excedente)의 실질적인 전유 능력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왔다.

이와 관련해 증권거래소(Bolsa de Valores)에 상장된 제조업 부문의 대표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평균 이익률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도표 1>). 이 도표에는 비제조업 부문 대표 기업들의 이익률 통계도 제시되어 있다. 태환법 시기에는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들의 경제실적은 저조했다. 이는 이익률 추이에 반영되어 이익률 감소, 마이너스 이익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외부 경쟁에 대한

〈도표 1〉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의 부문별 이익률 추이  
1995-2009 상반기 (%)



출처: Económica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노출 수준, 환율 지체[retraso cambiario], 높은 실질이자율 등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포스트태환법 시기에 사정은 확연히 달라졌다. 경제위기가 가장 심각했던 2002년에도 제조업 부문 기업의 평균 이익률(1.3%)은 199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생산·제조 활동 주로 수출 활동의 활성화에 따른 상대가격 구조 재조정, 내수 회복, 임금비용 감축 등이 제조업 부문의 대표 기업이 과도하게 많은 이익을 획득하게 된 요인들이었다.

이 같은 추세는 제조업 부문의 착취에서 발생한 총잉여를 독차지한 뒤에 내부화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제조업 부문 기업들이 취득한 이익의 주요 부분이 가격 추이로 인해 제조업보다 더 유리한 다른 부문에 투자되었다(대표적인 사례가 민영화된 공공서비스, 다양한 금융 활동 등이다).

2002년 이후 시기, 상대가격 재조정(사실상의 서비스 요금 동결과 마이너스 실질이자율 등)으로 과점 세력의 총이익에서 순이익의 비중이 급증하였다. 즉, 포스트 태환법 시기의 임금 감축과 생산성 증가를 통해 자본가들이 내부화한 대규모 이익은 제조업 '내부'에 유보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지배적 행위자에게로 이익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생산성/임금비용으로 계산되는 착취계수(coeficiente de explotación)의 급증 현상이 매우 높은

매출액 대비 이익률 증가 폭으로 나타난 것이다.<sup>9)</sup>

하지만 이미 2008년 말부터 제조업 자본에서 가장 집중도가 높은 분과, 학계와 언론계에서 이들을 대변하는 이들이 다시 평가절하 조치가 취해지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사 관계 ‘개편’, 임금 비용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신의 진짜 속셈은 뒤로 숨기고 뱃머리 장식(mascarones de proa)과도 같은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미국 기업 크래프트 푸드 아르헨티나 [Kraft Foods Argentina]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노·사 위원회[comisión interna]에서 다수의 노동자대표를 축출했고, 1일 8시간 3교대제를 12시간 2교대제로 교체하려 했다).<sup>10)</sup>

빼소화를 다시 평가절하하지는 제안은 국제금융위기 초기 국면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2009년 6월 말 실시된 연방 의회 선거를 몇 달 가량 앞둔 시점에서 는 평가절하 캠페인이 절정에 이르렀다.<sup>11)</sup> 하지만 그 뒤 정부는 공식적으로 현재의 환율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외지급준비자산의 높은 수준으로 인해 현재의 환율을 지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다만, 환율이 조금 변동하여 2009년 11월에는 달러당 약 3.80페소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1월과 대비해 9%가 상승한 것으로, 변동 폭이 아주 미미했다.

평가절하 캠페인과 병행하여 최근 몇 달 동안 기업가들은 임금 비용 감축을 목표로 거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들은

- 9)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위축 현상은 지속되어온 현상이다. 2002~2008년 시기 제조업 생산은 무려 85.2% 증가했지만, 공장 가동률은 고작 26.3% 증가했다.
- 10) 아르헨티나산업협회(Unión Industrial Argentina, UIA)는 2009년 9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동자들의 반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근로자 집단이 공공연하게 불법적인 수단을 의지해 공권력과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적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행동을 일삼고, 법질서가 보장하는 치안을 어지럽히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과 발전의 주축인 투자 환경과 공식부문 고용창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성명서는 고용주의 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미국 대사관이 전개해온 고용주 지지 활동과 적극적인 로비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 11) 선거 전 수개월간 평가절하 압력이 거세졌다. 당시 아르헨티나산업협회 책임자이자 전 생산부장관 호세 이그나시오 데 멘디구엔은 이렇게 말했다. “환율조정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경기침체이고,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디플레이션이다. 우리가 (평가절하로) 태환법 시기에서 벗어나기 전에도 디플레이션을 겪은 적이 있다.” 지중해 재단(Fundación Mediterránea) 소속 경제학자 호르헤 바스콘셀로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경기침체 추세를 역전시키고 이자율의 실질적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환율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산업협회의 대표직을 맡은 직후, 엑토르 멘데스는 환율이 “더욱 높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접국들과 비교해서 현재 환율이 우리에게 다소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위기를 주된 이유(혹은 핑계) 삼아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취업자 수 동결, 정리해고, 노동시간 단축, 고용조건 악화, 노동 강도 강화, 고용유지 조건부 임금 감축 제안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90년대가 남긴 유산 대부분은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법과 규제 체계는 90년대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집중도가 높은 분파는 2004~2007년 시기에 달성한 최고 이익률 수준을 회복하고, 이들이 그리워 마지않는 90년대에 수립된 노·사 관계마저도 더욱 후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실업률과 저고용률의 급증이 노동시장을 지배하던 시절도 회귀하고 싶은 것이다.

(박정훈 번역)